



발행일 2021년 03월 2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이슈와 논점

체육계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과 향후과제

임한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정부 대책과 개정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학기 중 합숙훈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 검토, 초등선수부터 철저한 대처방법 교육, 학교폭력 징계정보 이용의 명확화 개정, 스포츠윤리 센터의 체계화,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와 체육계 및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체육계 성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팀 감독의 여성선수 성추행 사건과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보도¹⁾ 이후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빙상 지도자의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유도, 태권도 등 스포츠 ‘미투’를 계기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2020년 6월에는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상습 폭행이 알려지면서 체육계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최근에는 배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선수의 과거 (성)폭력 의혹 제기와 학교폭력 가해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9년도부터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 중이고,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는 체육계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고 스포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추가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실태,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의 개정 내용, 정부 대책과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체육계 및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학습권 침해 등 인권 개선을 위하여 추가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나 보완책 등 향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생선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1)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초·중·고 학생선수 (63,211명)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²⁾에서 신체

1) KBS, 시사기획 〈쌈〉, 2008. 2. 11.· 3. 17.

2) 국가인권위원회,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보고』,

폭력은 14.7%, 성희롱·성폭력은 6.7%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표 1] 초·중·고 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 주요결과

(단위: 명, 건)

조사항목		조사대상 학생선수(B)	(피해)응답 학생선수(A)	응답비율 (A/B*100)	
폭력 및 성폭력	신체폭력	57,557*	8,440	14.7%	
	성희롱·성폭력	57,557	3,829	6.7%	
피해 시 대처방법	소극적대처(미신고등)	6,155**	4,898	79.6%	
	대처 이유	보복 등 우려	6,155	1,511	24.5%
		대처방법모름	6,155	801	13.0%
수업참여 훈련시간	수업결손	57,557	15,824	27.5%	
	장시간 훈련	57,557	35,386	61.5%	

※ 주: * 유효응답 ** 신체폭력 피해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보도자료, 2020.10.19.

초등학교 선수 2.4%(438명)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57.5%(252명)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폭력은 초등학교 선수 12.9%(2,320명), 중학교 선수 15.0%(3,288명), 고등학교 선수 16.1%(2,832명)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선수 신체폭력은 일반 학교폭력 대비 2.6배나 높았다.

(2) 대학교 및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침해 실태

대학교 운동선수 실태조사³⁾(102개 대학, 7,031명)에서 신체폭력 33%(1,613명), 언어폭력 31%(1,514명), 성폭력 9.6%(473명) 등으로 나타났고, 성폭력은 초중고 선수 피해보다 많았다.

실업팀 성인선수 실태조사⁴⁾(1,251명)에서 언어폭력 33.9%(424명), 신체폭력 15.3%(192명), 성폭력 경험 11.4%(143명), (성)폭력 목격경험 56.2%(704명) 등으로 나타났고, 거의 매일 맞는 경우도 8.2%로 신체폭력 피해가 심각했다.

(3) 초·중·고 학생선수 합숙소 운영실태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초·중·고 합숙소 폐지 조치와 전면적인 조사를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합숙소가 여전히 인권침해의 온상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확인되었고,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하여 상시적인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 것⁵⁾으로 나타났다.

(4) 최근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실시한 학생선수(2,083명)의 3년간 (성)폭력 등 실태조사⁶⁾에서 언어폭력 9.6%, 신체폭력 4.8%, 집단 따돌림 2.2%, 성희롱·성추행 1.5%, 성폭행 0.1%이 확인되었고, 가해자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파악되었다.

교육부가 2020년 7월~8월에 실시한 초·중·고 학생선수(59,401명)의 폭력피해 전수조사⁷⁾에서 초등학교 선수(1.8%)가 중·고등학교 선수(1.0%)보다 폭력피해율이 높았고, 일반 학생선수(1.3%)가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1.2%)보다 폭력피해율이 높았으며, 가해자 519명 중 학생선수는 338명, 체육 지도자는 155명, 교사는 7명, 기타 19명 등으로 학생선수가 65.1%를 차지하고 있었다.

3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

(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국회는 체육계 (성)폭력과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3차례 개정하였다.

2019. 11.

3)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운동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2019. 12.

4) 국가인권위원회, 『실업팀 성인선수 인권실태 조사결과』, 2019. 11.

5)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 2019. 10.

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21. 2.

7)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2020. 10.

2020년 1월 9일 개정에서는 체육인 권리 보호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가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강화와 장려금 중지·환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 실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장려금 중지 및 환수, 자격증 발급 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마련하였다.

2020년 8월 4일 개정에서는 법 목적에서 국위선양 삭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도입과 불공정계약 시정 요구,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상한 확대, 체육인 신고의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방법 규정, 신고인과 피신고인 물리적 공간 분리 권고, 신고자피해자에 불이익조치 금지,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실태조사 실시·발표 등 제도적 기반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0년 11월 19일 개정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상시 합숙훈련에 사생활 및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 유죄 확정자 명단 공표, 체육인 징계이력 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2)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국회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보장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학교체육 진흥법」을 2차례 개정하였다.

2020년 9월 24일 개정에서는 학교체육 주기적 감독, 학교 체육 주요 지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실시, 학생선수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실시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 2월 26일 개정에서는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 시 경기대회 참가 원칙적 금지, 고등학생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 시 경기대회 참가 허용, 학기 중 합숙훈련이 불가피한 경우 학교장의 학생선수 안전 및 인권보호 조치 의무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다.

4 정부의 대책과 추진 현황

정부는 스포츠계 폐쇄성과 엘리트체육 등으로 체육계 (성)폭력이 반복되는 상황과 과거 대책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안)’(2019. 1. 25.)을 시작으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2020. 8. 28),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2020. 12. 11),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2021. 2. 24) 등을 내놓았다.

(1) 문화체육관광부의 추진 현황과 최근 대책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및 추진 과제 발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학교운동지도자 징계 및 이력 확인을 위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 처벌강화를 위한 체육단체 규정 개정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스포츠혁신위원회 장기적인 정책 권고 사항을 제외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되었다.

현재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2019년, 총 7차) 사항 지속 이행, 체육지도자·실업팀 등 제도개선과 실태조사 등을 계획⁸⁾하고 있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국가대표·실업팀·프로스포츠 선수 선발에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한,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재발방지 제재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과학적 훈련방식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2) 교육부의 조치사항과 최근 대책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운동부와 합숙훈련 전반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하며,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8)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업무계획』, 2021. 2.

이에 2020년 7~8월에 학생선수(59,401명)의 (성)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80명(1.2%)의 피해를 파악하였고, 가해자 총 519명 중 310명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전문기관 연계 피해자 상담, 학교폭력사항 특기자 선발에 참고, 학생선수 폭력피해 매년 전수조사, 특기자전형 등에 최저학력기준 반영 확대, 학기별 1회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 및 권고 사항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2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전수특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6월 23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으며, 현재 기관의 이행계획을 검토 중이다.

[표 2] 기관별 주요 권고 사항

기관	주요 권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 밖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 마련 등
교육부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률·지침 개정 등
시·도 교육청	· 학교운동부 채용 시 선수인권 보호 노력 반영 ·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방법 교육 강화,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체계와의 연계 확대 · 학교 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원체계 확장 등
대한체육회	· 개인 활동 학생선수, 지도자 관리·감독체계 마련 · 적정 훈련시간 및 휴식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5 향후 과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학생선수, 실업팀 성인선수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해 있고, 현재도 계속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마련한 대책의 철저하고 신속한 이행과 개정 법률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시점이고, 추가적인 보완사항과 향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 (성)폭력 가해자로 선배나 또래가 많았고, 폭력행사가 비공개 장소로 변화하는 경향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적정 지점 설치와 학기 중 합숙훈련을 축소·제한하는 방안 검토 및 기숙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선수 징계정보의 통합관리가 중요한데, 최근 대책에서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징계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은 정했으나, 그 범위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학교폭력 개인정보 이용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부 폭력피해 조사에서 초등학생이 피해율이 높았고, 학교 밖이 학교운동부 보다 심각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성)폭력 대처방법 교육을 초등학교 운동선수부터 철저히 실시하고, 학교 밖 체육활동 대해서도 주기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체육계 (성)폭력의 공정한 조사와 처리 등을 위해서는 2020년 8월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이 중요하므로 전문인력 확충, 조사기준 정비, 피해자 보호·치료, 징계요청의 신속한 처리, 예방교육 강화 등 법정사무의 체계화와 조기정착이 요구된다.

다섯째, 실업팀·프로스포츠 선수선발에 학교폭력 사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 단체 등의 의지가 요구되고, 국가대표 선발에서는 종목단체에 적용되는 일관된 기준과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승리지상주의 체육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을 권고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목적이 체육인 인권 보호와 건강한 공동체 실현으로 변경되었는바, 이에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체육계 및 학교현장 지도자의 인식전환과 자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